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 8-9월호

*임팩트온의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는 매월 분야별 ESG 트렌드를 주제별로 정리해 제공하는 연중 기획 시리즈입니다.

임팩트온 홈페이지 www.impacton.net

조사 및 작성

01 석유화학/재생에너지/배터리	임팩트온 송선우 에디터
02 반도체/IT/철강/조선	임팩트온 이재영 에디터
03 자동차	임팩트온 홍명표 에디터
04 기후테크 및 순환경제	임팩트온 송준호 에디터
05 공시 및 ESG 리스크	임팩트온 박란희 편집장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01. 석유화학/재생에너지/배터리

Key Takeaways

- 미국의 태양광 관세 회피를 위한 동남아 우회수출이 불가능해지자, 중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해당 공장들은 대부분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에 IRA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 당선이 친환경 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가 속속 나오고 있다. 해리스 후보의 경우 IRA를 통한 친환경 투자확대가 예상되나 전기차 의무화 등 환경규제에 대한 속도조절이 있을 수 있으며, 트럼프 후보의 경우 IRA 폐지 등의 강경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으나 세제혜택 전면 폐지 등의 극단적 조치는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 지속되는 저유가와 경제마진 축소로 인해 화석연료업계가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3분기 기준 미국 전체 산업 섹터 중 가장 낮은 추가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분기 대비 큰 폭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

중국 태양광기업, 美 동남아 우회수출 규제 강화로 인해 미국 현지 공략



진코 솔라의 플로리다 태양광 패널 제조 공장

중국 태양광 업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 기업의 저가공세로 인해 미국 태양광 산업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정부가 중국산 패널에 대한 관세와 동남아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산 패널 수입이 늘고 있다.

이에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은 미국 상무부에 베트남 및 태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소급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 베트남과 태국산 패널 수입량은 각각 39%와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패널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자, 중국 업체들은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옮겼고, 이에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의 동남아시아 4개국은 중국외 지역 태양광 패널 생산용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동남아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태양광 산업계와 상무부가 동남아산 패널에 대해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자 융기실리콘, 트리나 솔라 등의 중국 주요 태양광업체는 동남아시아에서의 패널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모양새다.

대신 이들은 미국 현지에 직접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 일례로 융기실리콘은 미국 에너지기업 인베너지(Invenergy)와 합작 기업 일루미네이트(Illuminate)를 설립해 오하이오 주에서 5GW규모의 패널조립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트리나솔라 또한 텍사스에 5GW규모의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짓고있다. 하지만, 해당 공장들은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핵심 공정인 태양광 전지 제조와 폴리실리콘 정제는 여전히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9월, 진코 솔라(Jinko Solar)는 중국 태양광 기업 최초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제 혜택을 받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진코 솔라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플로리다 공장을 설립해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제조해왔으며, 타 중국기업과 달리 관세 우회 기업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진코 솔라는 플로리다 공장의 생산 캐파를 연400MW에서 1GW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 [중국 태양광 기업, 동남아 생산 축소...미국 현지 직접 공략](#)

☞ [美 태양광 패널제조 업체, “동남아 기업은 사실상 중국계...관세 소급 부과하라”](#)

해리스와 트럼프의 당선 시나리오에 따른 친환경 산업 전망은?



이미지 출처/MSNBC 유튜브 채널

미국 대선이 1달 남은 가운데, 카말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시나리오에 따른 친환경 산업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로이터, 블룸버그 등의 주요 외신은 두 후보의 주요 발언과 정책을 상세하게 분석해 친환경 산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에너지 분야의 비용 절감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에너지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먼저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IRA를 통한 친환경 산업 성장 촉진을 주요 어젠다로 삼고 있다. [해리스 후보의 경제 정책 계획서](#)에는 에너지 비용 절감이 핵심 사안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IRA가 있다. 계획서는 “지난 2023년 가정용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대한 세금공제를 통해 약 340만 개의 미국 가정이 에너지 분야에서 84억달러(11조 2100억원)를 절약했다”며 IRA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비용절감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당선 시 IRA를 통한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 간소화를 통해 청정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간을 단축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시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와 IRA법안 혜택확대가 예상되기에, 우리 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 해리스 후보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 주이자 자동차 산업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의 민심을 고려해 전기차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을 꾀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전기차 의무화 정책에 대한 강도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해리스 후보 당선시, 친환경 규제의 강도에 따라 미국 내 전기차 산업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후보는 IRA와 그린 뉴딜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며, 해당 정책들이 미국 내 에너지 비용 상승과 일자리 소멸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당선시 IRA의 미사용 자금을 철회하고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종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밴스 부통령 후보는 “재생에너지에 집중된 지원정책이 화석연료업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밴스 후보의 강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최근 앨라배마, 조지아, 텍사스 등 공화당 우세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퍼스트 솔라(First Solar)는 앨라배마에서 11억달러(1조 4700억원)규모의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을 발표했으며, 아레비아 파워(Areva Power)는 네바다에서 23억달러(3조 700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시설 건설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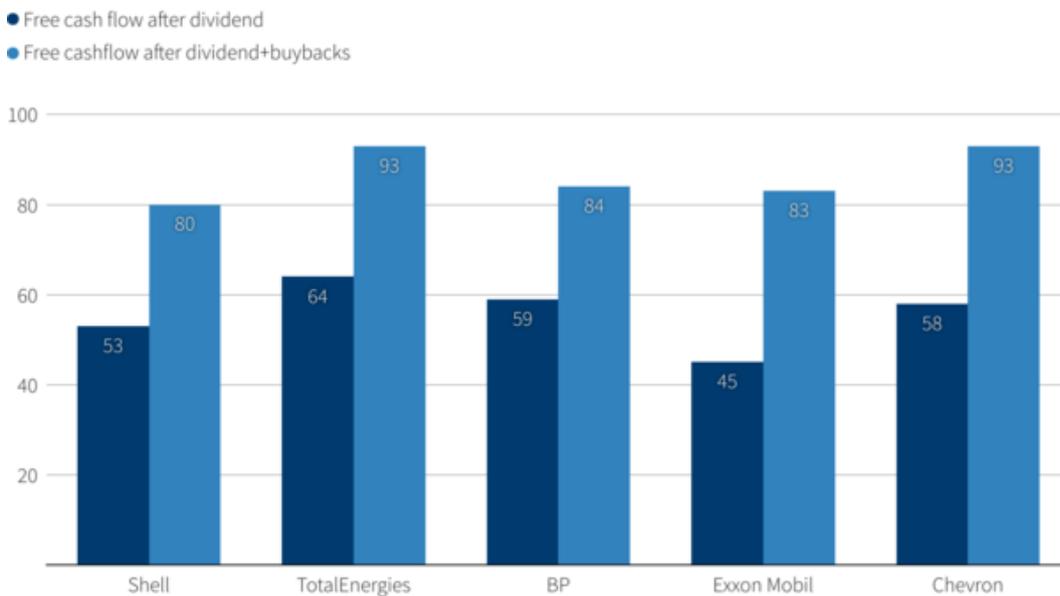
이에 공화당 의원 및 주지사들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해당 시설의 투자결정 과정에서 IRA의 세제혜택이 핵심역할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친환경 산업에 대한 IRA혜택을 전면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행사보고서: \[E:ON Report\] 제 4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3분기 실적발표 앞두고 글로벌 화석연료산업 전망 어두워

Big Oil's breakevens

Top western oil firms need Brent crude oil prices of at least \$80 a barrel to sustain their shareholder returns



Note: Average price of Brent crude oil in \$

Source: RBC Capital Markets

글로벌 화석연료기업의 배당 지급전후 손익분기점/RBC Capital Markets

낮은 유가와 정제마진 축소로 인해 글로벌 화석연료 업계에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유가가 80불 아래로 하락한 이후 가격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9월초에는 유가가 68달러까지 떨어졌으나 (WTI 기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가 격화되면서 유가가 소폭 상승해 70불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반기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화석연료업계의 올해 3분기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일례로 엑손모빌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2분기 대비 수익이 16억 달러 (2조 133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화석연료기업의 주가 또한 하락세에 들어섰다. 특히 올해 3분기, 에너지 산업은 -2.9%의 주가수익률을 기록하며 미국의 모든 산업 섹터 중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이며 암울한 미래 전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유가 변동에 가장 취약한 업스트림 업체의 경우 타격이 더욱 크다. 미국의 3대 업스트림 석유 기업인 마라톤 페트롤리움(Marathon Petroleum), 발레로(Valero), 필립스 66(필립스 66)은 올해 3분기에만 평균 -8.3%의 주가 하락을 기록했다.

문제는 화석연료업계가 투자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초 대대적인 배당확대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이다. 수익성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당 지급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글로벌 화석연료기업들의 재무적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RBC캐피털 마켓에 따르면, 배당을 제외한 화석연료기업들의 손익분기점 유가는 50-60불 가량이지만 배당을 포함하면 80-90달러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달라진 메이저 정유사들…셀, 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 줄이고 주주 배당금 늘려](#)

Editor's Comment:

미국 대선과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두 가지 큰 글로벌 이벤트가 에너지 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기업 또한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상황 발생시 조속히 대응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02. 반도체/IT/철강/조선

Key Takeaways

- 반도체 업계가 환경 규제를 막기 위한 정치권 로비에 나섰다. 반면 미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반도체 재료 및 공정 개발을 위해 1억달러(약 1348억원)의 연구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공급망 탈탄소화 전담팀을 신설했다. 빅테크들이 공급망 배출량 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 PFAS 규제 피하러 로비... 백악관은 지속가능한 반도체에 거액 투자

미국이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을 제정,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업계가 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한 로비에 나섰다.

8월 24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은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 불리는 PFAS 규제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로비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PFAS란 탄소화 불소가 결합된 화학물질로 마찰과 높은 온도를 견뎌낼 수 있다. 늘어붙지 않는 프라이팬부터 반도체 칩 설계 시 회로 오염 방지재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활용도는 높지만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인체에도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산업협회(SIA)가 만든 PFAS 컨소시엄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정책 입안자들을 상대로 150만달러(약 20억원) 규모의 로비를 해왔다. PFAS 컨소시엄은 PFAS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체 물질 개발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삼성전자,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4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PFAS 컨소시엄은 지난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PFAS를 규제하면 반도체 제조 비용 상승 등 심각한 공급망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이 반도체 업계의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지속가능한 반도체 재료 및 공정 개발을 위해 최대 1억달러\(약 1348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속가능한 반도체 재료 개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간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는 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지난 4월 PFAS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식수 기준을 발표했고, 부통령 후보이자 미네소타주 주지사 팀 월즈(Tim Walz)는 지난해 이미 식품포장재, 의류, 조리기구 등 다양한 일반 소비재에서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한 바 있다.

☞ [반도체업계, 미국 PFAS 규제 막는데 '20억' 로비... TSMC, 삼성전자도 동참?](#)

☞ [미국 환경청, 식수에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규제 첫 발표](#)

☞ [3M, 영원한 화학물질 PFAS 문제로 103억 달러 합의](#)

IT업계, 공급망 배출량 감축에 본격 드라이브

9월 MS가 공급망 내 탄소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급증하고 있는 공급망 내 탄소 배출량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MS 총 배출량의 96%는 스코프 3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급망 관리 없이는 기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셈이다.

지난 5월 발표된 MS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스코프 1, 2에 해당하는 탄소배출량은 2020년 대비 6.3% 줄었지만, 스코프 3에 해당하는 공급망 간접 배출량은 30.9%가 증가했다. 배출량 증가의 원인으로는 데이터 센터 건설에 사용된 반도체, 하드웨어 부품, 연료, 건축 자재 등이 지목됐다.

이에 MS는 본격적인 협력업체 관리에 나섰다. 2030년까지 주요 공급업체들에게 2030년까지 100% 무탄소 전기 사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대상 기업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무탄소 전원에는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자력, 바이오매스, 수소 등이 폭넓게 허용될 방침이다.

공급망 배출량 관리에 나선 것은 MS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아마존은 협력업체들에게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수립,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마존은 이와 같은 계획안을 제출하고 실질적인 탈탄소화 성과를 내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아마존의 스코프 3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75%다.

[MS, 아마존을 포함한 구글, 메타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지난 7월 공개 서한](#)을 발표, 데이터 센터 공급망 내 기업들을 상대로 환경제품선언(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제도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빅테크들이 공급망 내 기업들에 디지털 인프라 탈탄소화를 촉구했다. / iMasons Climate Accord

EPD란 제품의 환경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보고서로, 제품 수명 주기 전체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자원 사용 등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빅테크들은 디지털 공급망 기업들에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제품이 전 과정 평가(LCA)를 받을 것을 촉구한 셈이다.

☞ [MS, 공급망 탈탄소화 전담팀 신설...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영향 있나?](#)

EU CBAM, 유럽 철강업계 보호 수단 되나... dragged 보고서 발표

EU CBAM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마리오 dragged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9월 EU 경쟁력 보고서를 발표, CBAM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EU 역외 파트너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당초 의도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에 부과하는 탄소 배출 세금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2026년부터 의무화된다.



드라기 보고서

보고서는 CBAM을 역내 기업 보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유럽 철강업계의 경쟁력을 보존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철강업체들이 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CBAM이 당초 의도대로 탄소 누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는 EU 역내 철강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 무료 할당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드라기 보고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의뢰로 작성된 것으로, 오는 11월 출범하는 2기 행정부 정책 수립에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CBAM 다시 개정? '드라기 보고서'에 등장한 전망](#)

Editor's Comment

기업과 각국 정부의 지속가능성 노력이 보다 정교해지고 구체화되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과 경제 및 산업경쟁력을 둘 다 잡으려는 정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노력이 엇보인다.

특히 EU 차기 행정부의 정책적 토대가 될 드라기 보고서에서는 EU의 기본 가치인 번영, 평등, 자유, 평화, 민주주의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생산성 제고를 통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후 정책 리더인 EU의 방향성이 경제적 성장을 가리킨 만큼, 향후 주요국들의 ESG 정책 추이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03. 자동차

Key Takeaways

- 중국이 값싼 전기차로 서구 시장을 장악하면서, 유럽연합(EU)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
-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목표를 철회하거나 축소했다. 각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 조치도 제조사들의 목표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 주요 내연기관 제조사들이 수소를 직접 연소시키는 내연기관 트럭 개발에 나섰다. 수소연료전지차량보다 저렴하고 기존 내연기관 엔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중국 전기차의 폭풍 성장... 글로벌 시장 재편 가속화

중국 전기차가 세계 전기차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올해 초부터 BYD를 필두로 주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은 유럽 시장까지 빠르게 공략, EU는 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부과 방침까지 발표했다. [중국은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이에 반발했다. 앞으로도 전기차를 중심으로 EU와 중국 간 무역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또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시 중국산 전기차에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치권은 멕시코에서 대량 생산을 계획 중인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전기차기업 BYD가 멕시코 공장 설립을 오는 11월 미 대선까지 보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으나, BYD는 사실 무근이라며 "멕시코 시장은 미국 수출과 관계 없이 중요한 시장"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전기차는 본토에서도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일례로, BYD의 매출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8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GM, 현대차, 폭스바겐 등 해외 브랜드들은 중국 내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국인들의 자국 브랜드 선호 경향이 뚜렷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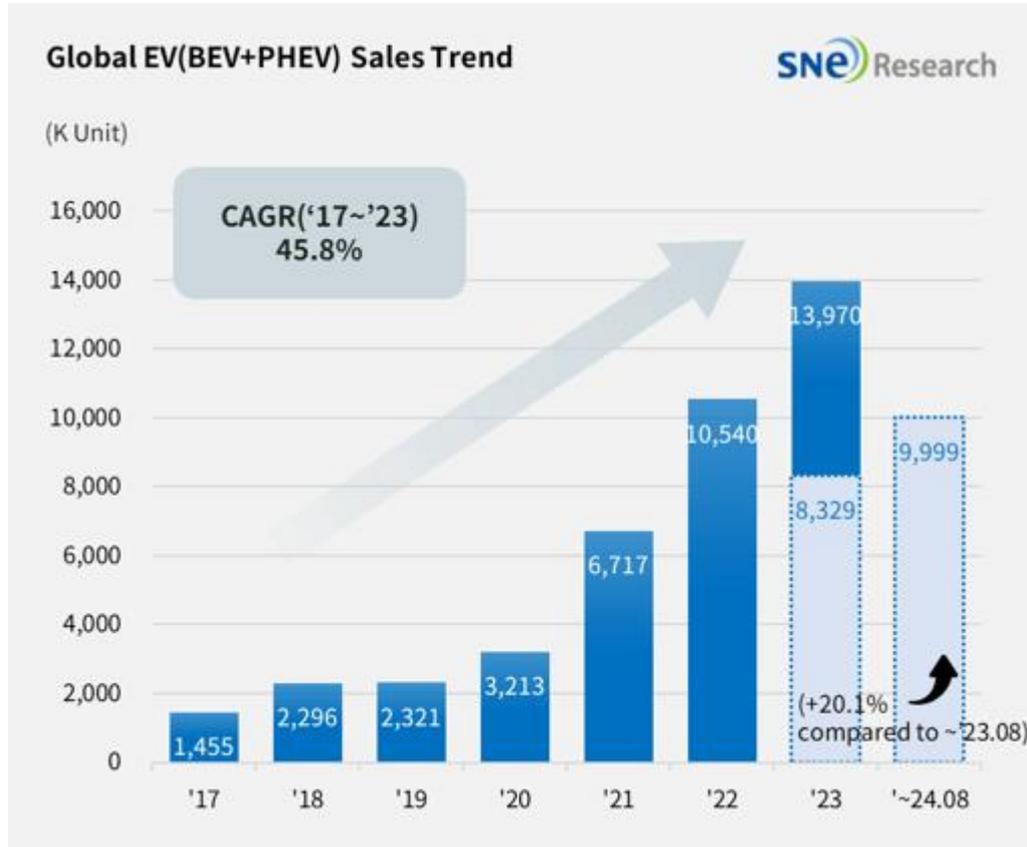
☞ [중국, 고율 관세를 이유로 EU를 WTO에 제소](#)

☞ [BYD,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 급상승](#)

☞ [지커, 세계 초고속 충전 배터리 출시](#)

시장 호조에도... 자동차 제조사, 판매 목표 축소

올해 1~8월 전 세계 전기차 인도량이 약 1000만대를 기록, 지난해 동기 대비 20.1% 증가했다. 특히 중국시장은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2024년 9월 Global Monthly EV and Battery Monthly Tracker / SNE리서치

시장 호조에도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목표를 축소하거나 조정해 나갔다. 볼보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려는 계획을 철회, 대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최소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르노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계속해서 출시할 예정이다.

제조사들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전기차 판매량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지금도 전기차는 여전히 내연기관차보다 비싸다.

2020년 초 자동차업계는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면 전기차 부품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이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원인은 다양하다. 일단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 전자 부품들의 비용이 여전히 높다. 정부 보조금도 줄었다.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제조사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완전 전기차 전환의 중간단계로 활용하려는 이유다.

[시장조사 기관 SNE리서치](#)는 2024년 말 또는 2025년부터는 유럽과 미국 지역의 전기차 시장에 신차가 출시되며 성장률이 다소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SNE리서치 보고서 - 2024년 1~8월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약 1,000만대, 전년 대비 20.1% 성장](#)

서구 제조사들, 수소 연소 내연기관 개발에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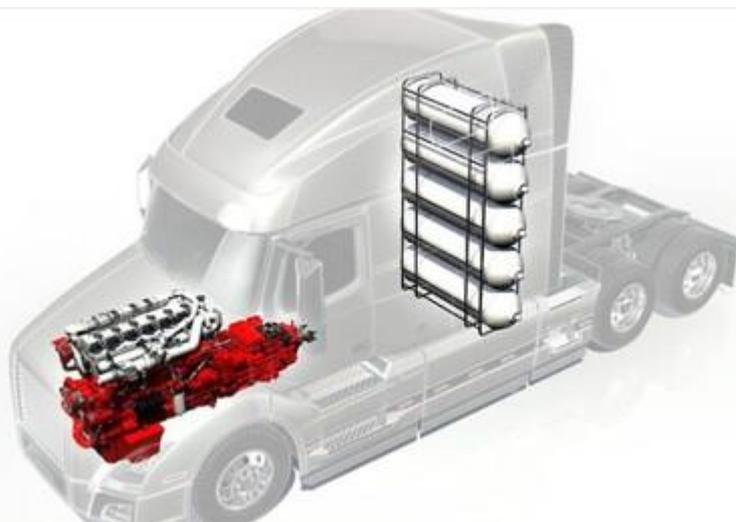
서구의 트럭 제조사들이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수소 연소 내연기관 개발에 나섰다. 전기 배터리를 장거리용 화물 트럭에 활용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충전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수소 연료 전지라는 대안도 있지만, 수소 전지만을 위한 새로운 생산시설 개발에는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소를 직접 연소시키는 수소 연료 내연기관은 커다란 장점을 가진다. 기존 내연기관 제조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 본사를 둔 차량 엔진 제조사 만(MAN)은 2024년 수소 엔진을 장착한 트럭 200대를 유럽 고객들에게 시범 공급할 예정이다. 볼보 역시 2026년부터 수소 내연기관 테스트에 들어간다.

수소 연소 기술은 충분히 성숙했지만, 수소 연료 시 일부 유해 물질이 배출될 수 있어 이를 걸러낼 필터가 필요하다. 수소 트럭에 장착될 고압 탱크의 안전 관리도 중요한 문제다. 수소는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성 보장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로이터](#)는 수소 연소 트럭의 가장 큰 문제는 친환경 수소의 공급이라고 보도했다. EU와 미국이 친환경 수소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일부 제조사들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엔진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커민스(Cummins)가 개발 중인 수소 연소 내연기관의 이미지./홈페이지.

보쉬(Bosch), 커민스(Cummins) 등 대형 공급사들은 이미 수소 연소 엔진에 맞춘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확보, 신속한 시장 진출이 가능한 상태다. 로이터는 커민스가 몇 년 내 수소 연소 엔진을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며, 이는 기존의 내연기관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ditor's Comment

중국 전기차의 파죽지세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과 유럽의 노력이 만만치 않다. 4일(현지시각)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 부과를 확정할 만큼, 앞으로 글로벌 전기차 전환 흐름이 어떻게 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전기차 시장을 중국에 빼앗긴 서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소를 직접 연료로 쓰는 내연기관 개발에 나섰다. 상용화될 경우, 내연기관 생산라인을 그대로 쓸 수 있어 제조 비용 절감에 따른 시장 파괴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04. 기후테크 및 순환경제

Key Takeaways

- 미국 정부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부 브리핑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량의 규제를 핵심으로 하기에 플라스틱 업계는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이자 플라스틱 제조사인 엑손모빌이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과장했다는 그린워싱 혐의로 소송전에 들어갔다. 플라스틱 재활용이 소송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이를 피해 새로운 접근을 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투자자들은 기후테크에 선뜻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이는 정치권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후테크 산업의 특성상 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에 대한 정부 투자와 기업의 사업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협약, 미국의 입장 선회...‘민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업들

미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지난 8월 로이터통신의 단독보도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협상단으로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마지막 5차 회의(INC-5)에 참가할 한 관계자가 백악관에서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찬성할 것이라는 내용의 브리핑이 있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해결 방식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먼저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하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의 산유국과 주요 생산국인 중국은 생산량을 줄이자는 협약 내용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제5차 회의에서도 생산량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재활용을 장려하고 포장 디자인을 변경하자는 이차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춰서 협약안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지=언스플래시

유럽은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국제협약과 입장을 같이한다. 특히, 유럽연합을 필두로 66개국 가입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야심 찬 목표 연합(HAC)은 지난달 장관급 선언을 통해 올해 국제협약의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HAC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도 요구했다. 한국도 HAC 가입국으로 이번 선언에 참여했으나, INC-5의 개최국으로서 보다 명확한 입장과 전략을 밝히지 않아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인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로 입장을 선회하는 듯 하자, 산업계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반응이다. 미국화학위원회(ACC)는 지난 8월 바이든 정부에 ‘배신’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크리스 안 ACC 회장은 “플라스틱 생산량을 제한하고 화학물질을 규제하려는 내용의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백악관은 미국 제조업과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배신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 [美정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지지…미국 화학협회 “제조업에 대한 배신”](#)

☞ [미국 연방정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새 전략 발표](#)

엑손모빌, 플라스틱 재활용 소송...제3의 길 찾는 산업계

플라스틱 재활용은 소송 리스크에도 노출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이자 플라스틱 제조사인 엑손모빌은 23일(현지시각) 플라스틱 재활용 부문에서의 그린워싱 혐의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송전을 치르게 됐다. [비영리단체 기후 무결성 센터\(Center for Climate Integrity\)가 2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2021년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5~6% 수준에 불과하다.

소를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 롭 본타는 “(엑손모빌이) 플라스틱 폐기물의 대부분을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 오랜 기간 대중을 속여왔다”며 “엑손모빌이 열분해 재활용 기술을 전면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주 정부와는 별도로 시에라 클럽(Sierra Club) 등 환경단체들도 이 건에 엑손모빌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결과는 미지수지만,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리스크가 커지면서 제3의 길을 찾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거대 해운회사 머스크의 지주회사인 A.P. 몰러 홀딩(이하 몰러)은 ‘화석연료 없는 플라스틱 생산’을 기치로 내걸었다. 몰러는 30일(현지시각) 15억유로(약 2조원)를 들여 화석연료 대신 메탄올을 사용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벤처기업 비오네오(Vioneo)를 설립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이미지/픽사베이

이는 플라스틱 문제를 생산 감축과 재활용의 양극 구조가 아닌 온실가스 배출량 이슈로 치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비오네오는 유럽 최대 화학 클러스터가 위치한 벨기에 앤트워프(Antwerp) 지역에 첫 번째 생산 단지를 건설하여 연간 최소 15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약 30만 톤의 화석연료 없는 플라스틱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투자 결정은(FID) 2025년에 확정되며 상업운영은 2028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재활용이 자금 조달의 기회로 이어지는 사례도 관측된다. [유럽의 은행들이 화석연료 기업에 자금 조달을 중단하면서 빈 자리를 북미의 지역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채우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대의 석탄수출업체이자 재활용 기업인 글렌코어에 투자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의사결정에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 등을 평가하는 순환성 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이 투자은행은 순환경제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재활용 원료의 사용량을 두 배로 늘리는 목표를 채택했지만, 재활용 원료 사용률은 2010년 10.7%에서 약간 증가한 11.5%에 불과하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상황에서 규제기관은 기업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에 순환성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캘리포니아 주 정부, 엑손모빌에 소송... "엑손모빌 재활용 기술 성과는 거짓말"](#)

☞ [화석 연료 없는 플라스틱 시대 열린다... A.P. 몰러 홀딩, 친환경 플라스틱 벤처 설립](#)

☞ [북미 지역은행, 화석연료 대출 급증...골드만삭스, '순환성 지표'로 글렌코어 투자](#)

금리 인하에도 힘없는 美기후테크, CCUS에 집중

기후테크 투자가 금리 인하에도 큰 변동 없이 관망세에 들어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연 5.25~5.5%에서 연 4.75~5.0%로 기준금리를 0.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4년 만에 단행된 큰 폭의 금리인하다.

문제는 대선이다.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정책을 모두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자, 투자자들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9월 26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77% 고액 자산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매력적인 산업으로 헬스케어, 지속 가능성 투자, 기술 산업을,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국방, 에너지, 제조업을 꼽았다.

벤처 캐피털 SOSV의 설립자 셀 오설리반(Sean O'Sullivan)은 26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9월에 발표된 연방 금리 인하로 자본 집약적인 기후 기술에 대한 자금 조달 상황이 나아졌지만, 미국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과 자본 시장의 경색 등 다른 거시적 문제들이 투자자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SOSV는 250개 이상의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한 벤처 캐피털로 올해 4월 기준 15억달러(약 2조원)를 운용하고 있다.



이미지=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인스타그램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X(트위터) 게재된 사진을 임팩트온이 수정

기후테크가 전반적으로 데스밸리를 걷고 있지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중 특히 DAC(직접탄소포집) 기술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8월 DAC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5250만 달러(약 719억원) 규모의 상금을 내걸었다.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는 미 정유사 옥시덴탈 페트롤리엄과 셸은 각각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에 DAC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도 각기 다른 이유로 CCUS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셸과 에퀴노르는 지난달 노르웨이에서 생산해 독일로 수출하는 블루수소 사업에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중단하고 CCS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BP는 CCUS의 새로운 시장으로 아태지역을 선택](#)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 컨설팅기업 라이스태드 에너지\(Rystad Energy\)가 8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아시아 태평양\(APAC\) 지역 내 탄소저장 허브 국가 자리를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최대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영국의 드랙스 그룹은 미국 정부의 대규모 청정에너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미국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125억 달러\(약 17조원\)를 투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AI 사용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빅테크 기업들도 DAC에 투자하고 있다. [구글은 직접 공기 포집\(DAC\) 스타트업 홀로센\(Holocene\)과 10만톤의 탄소 제거 크레딧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픈AI의 샘 알트만은 미국의 DAC 스타트업 하임달에 투자](#)했다. 유럽에서도 [정유 기업 에니가 이탈리아 최초의 CCS 프로젝트 가동](#)하고 EU에 [최초의 육상 DAC시설](#)이 들어서는 사례가 관측되고 있다.

☞ [기후테크 투자, 금리 인하에도 대선 불확실성에 주춤](#)

☞ [미 에너지부\(DOE\), DAC 기술 상용화 위해 700억원대 DAC 상금 내걸어](#)

☞ [트럼프, 반기후 정책 공약... "신규 시추, 정유소, 발전소, 원자로에 대한 신속한 승인"](#)

[미국 투자자 77%, 미국 대선을 앞두고 포트폴리오 변경 고려…USB 조사](#)

Editor's Comment:

미국의 대선이 플라스틱과 기후테크 모두의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협약은 미국의 입장 변화로 균형추가 기울어지는 듯하지만, 미국 대선이 마지막 협상보다 20일 먼저 치러지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관망세인 기후테크도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부 지원과 금리인하를 등에 업고 다시금 투자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달 있을 대선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듯하다.

05. 공시 및 ESG 리스크

Key Takeaways

- 유럽연합에 이어, 아시아와 호주에서도 지속가능성 의무 공시가 속속 제도화하고 있다. 홍콩은 ISSB 공시 기준과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공시표준 초안을 발표했고, 2025년 의무공시를 시작하는 싱가포르와 호주 또한 스코프3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발표했다.

- 2026년 유럽연합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중국이 ETS(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에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추가한다. 또 중국은 배출량 감축 기준도 절대 목표량 기준으로 바꾸고, 제품 탄소발자국 측정기준 마련, 제품 탄소라벨 인증 등의 종합적 탄소 감축정책을 펼 방침이다. 한편, 태국에선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탄소세를 도입할 방침이다.

- 유럽연합에선 제품이 고장났을 때 소비자들이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소비자 수리권 지침(R2R)’이 발효해 순환경제를 촉진할 방침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경우, 탄소상쇄 크레딧을 발행해온 인증기관인 골드스탠다드와 베라의 8가지 탄소상쇄방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반면, 까다로운 규제로 시장의 불만이 높았던 영국의 ‘금융상품 그린워싱 규제안’은 오는 12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됐고, EUDR(삼림벌채법) 또한 오는 12월에서 내년 12월로 1년 연기됐다.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확산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챗gpt 이미지 생성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시작된 이후, 다른 나라에서도 공시 법제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먼저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공시 기준에 관한 초안을 발표했다.

홍콩공인회계사협회(HKICPA)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표준과 완전히 일치하는 표준 초안을 발표했다고 지난 9월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기준의 이름은 HKFRS S1과 S2로 ISSB의 공시 기준인 IFRS S1과 S2를 기반으로 했다.

2025년 상장기업부터 의무공시를 시작하는 싱가포르도 같은 날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포함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한 주요 수정 사항을 발표했다. 싱가포르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은 2025년부터 시작, 2027년 10억달러(약 1조3300억원) 이상 매출과 5억달러(약 6643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비상장 대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스코프3 배출량 공개도 의무사항으로 2026년부터 적용되며, 스코프 1과 2 배출량에 대한 제3자 검증도 2027년부터 의무화된다. 싱가포르는 시장규제기관인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규제기관(SGX RegCo)와 회계 및 기업 규제당국(ACRA)가 공시를 담당한다. 싱가포르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 Scope3 의무보고의 경우, 대형 상장사부터 적용하며, 제3자 검증을 장려하는 요건도 추가됐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2일(현지시각)에는 호주 상원의원에서 기후 공시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의 추가심의를 거치지만, 사실상 최종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스코프1, 2, 3 배출 보고를 포함하며, 직원 수 500명 이상, 매출 5억호주달러(약 4517억원) 이상 또는 자산 10억호주달러(약 9033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공시를 시작해야 한다. 이후 2026년 7월부터 중견기업으로 공시 대상이 확대된다. 스코프3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허용하며, 공시 의무화 이후 1년 동안 스코프 3 공시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재무 공시와 유사하게 제3자 보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 홍콩, 지속가능성 공시 초안 발표...싱가포르, 제3자 검증 강화와 스코프3 공시 연기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45>

☞ 호주 상원, 기후 공시 의무화 법안 통과... 제3자 보증도 요구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05>

중국, ETS에 시멘트, 철강 등 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정방식 변경 태국선 탄소세 시행 예고



중국이 CBAM에 대응해 시멘트, 철강, 1차 알루미늄 등 1500여개 기업을 ETS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발표했다./ 챗gpt 이미지 생성

유럽연합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으로 인해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 9월 9일(현지시각) 시멘트, 철강, 1차 알루미늄 사업 등 총 1500여개 기업이 국가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ETS)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전체 탄소배출량의 60%가 탄소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현재 중국 ETS에는 전력 부문만 포함되었으며, 거래량과 탄소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 배출권 가격은 톤당 92.84위안(약 1만7483원) 수준으로, 유럽의 70달러(약 9만3975원)보다 훨씬 낮은 수치여서, 2026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대응하기 벅찰 위험이 높다.

중국 당국은 향후 석유화학, 비철금속, 제지, 항공 등 고배출 산업을 추가로 포함, 2030년까지 중국 탄소배출량의 70%를 커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책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지난 8월 2일(현지시각)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에너지 사용량 또는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해왔지만, 전체 탄소배출량

대비 고정 목표를 설정하는 절대 배출량 관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2030년에는 배출정점을 찍은 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적 감축을 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탄소배출량 통계, 회계 제도 개선, 산업별 탄소배출량 회계기준, 제품 탄소발자국 기준 도입 등을 시행하며, 국가 탄소배출량 거래 시장 산업범위 확장과 유료 할당 확대, 제품 탄소발자국 측정기준 마련(2027년까지), 제품 탄소라벨 인증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종합적인 탄소 감축 정책을 펼 방침이다.

한편, CBAM의 시행으로 인해 글로벌 탄소가격에 대한 기준선이 마련될 움직임이 보이자, 아시아에선 탄소세를 시행하는 국가가 탄생했다. 2019년 탄소세를 도입한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에서 두번째로 태국에서 탄소세를 도입할 전망이다. 태국 재무부는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탄소세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9월 30일(현지시각) 밝혔다.

앞서 태국 정부는 2025년까지 탄소세를 시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탄소세는 온실가스 발생 배출원에 부과되며, 우선 석유제품에 톤당 200바트(약 8100원)의 세율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규제에는 규제로... 중국, EU CBAM 대응 위해 ETS 확대 계획 들고 나와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44>

☞ 중국 국무원,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전환...제15차 5개년 계획 발표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49>

☞ 태국, 2025년 탄소세 시행 예고... 소비자 부담 최소화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78>

EU 제품 수리권 발효, 자발적 탄소시장 기준 강화 등 한쪽선 규제 강화 EUDR과 영국 그린워싱 방지규정 등 일부 규제는 연기돼



유럽연합의 '소비자 수리권 지침'과 같은 규제는 시행되고, EUDR이나 그린워싱 지침 등은 연기됐다./ 챗gpt 이미지 생성

유럽연합은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품 고장 시 교체를 대신 소비자들이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지침(Right to Repair, R2R)이 발효됐다고 8월 1일(현지시각) 밝혔다. 지난 2월 소비자 수리권 보장하는 지침에 합의한 지 5개월만으로, 이 지침에 따라 EU 각 회원국들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이 지침을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핵심 내용은 2년 법적 보증기간 내에 더 쉽고 저렴한 옵션을 통해 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2년 보증기간 이후에도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적용 제품은 가정용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전자 디스플레이, 진공청소기, 휴대폰과 태블릿, 데이터 서버, 용접장비 등이다. 제조사는 제품 내구성을 강화해야 하며, 독립적인 수리업체가 부품 및 수리도구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 또는 3D프린팅으로 생산한 부품 사용도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한동안 주춤했던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규제도 정비되고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어온 자발적탄소시장 청렴위원회(ICVCM)는 지난 8월 6일(현지시각) 대표적인 크레딧 인증기관인 골드스탠다드와 베라의 8가지 유형의 탄소상쇄 방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 인증 크레딧은 전체의 3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ICVCM은 품질 신뢰도가 낮은 탄소상쇄 크레딧의 난립을 막기 위해 품질 제고에 나서고 있는데, 이번 방침 또한 그 일환이다. 제외되는 방법론에는 재생가능에너지원에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바이오매스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난방연료를 화석연료에서 지열에너지로 대체하는 등의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핵심 이유는 '추가성(Additionality,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탄소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린워싱 이슈로 기업들의 외면을 받아온 자발적 탄소시장이 ICVCM의 강도높은 개선 이유로 다시 회복될 지 주목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갑론을박이 무성한 일부 규제가 미뤄지는 일이 발생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는 금융상품의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라벨링 규칙을 내년 4월로 연기했다고 9월 12일(현지시각) 로이터가 밝혔다.

지속가능성 라벨은 ▲지속가능성 포커스(Sustainability Focus) ▲지속가능성 개선(Sustainability Improvers) ▲지속가능성 영향(Sustainability Impact) ▲지속가능성 혼합 목표(Sustainability Mixed Goals) 네 가지이며, 펀드의 자금이 해당하는 라벨을 달성하기 위해 70% 이상 할당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FCA는 “일부 기업들이 추가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한 연장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자산운용사들은 지속가능성 라벨링 자격요건이 까다롭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기업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규제가 연기된 사례는 EU의 삼림벌채규정(EUDR)이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은 2025년 12월부터, 중소기업은 2026년 12월부터 EUDR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동안 EUDR에 대해 EU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은 농가에 피해를 주고, 농가들의 제품 수출이 금지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법률을 축소하거나 가능하면 중단하라”고 요청해왔다.

게다가 중국을 비롯한 일부 무역 파트너국가에서는 매우 민감한 정보인 지리적 위치 데이터 공유를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버티는 등, 무역 갈등까지 벌어질 조짐이었다. 하지만 EU는 규제의 수위를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가 지침에는 “EUDR 규정을 어길 경우 기업에게는 최대 매출액의 4%를 벌금으로 부과하는데, 이보다 낮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반복적인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벌금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 EU 제품 수리권 발효…이에 대한 구글,애플 등 업계의 반응은?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30>

☞ ICVCM, 자발적탄소시장 기준 강화…탄소 크레딧 32% CCP라벨 인정 안돼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76>

☞ 英금융감독당국, 그린워싱 방지 규정 연기…자산운용사는 환영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62>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 삼림벌채 규제에 12개월 연기 결정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720>

Editor's Comments

2025년은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에 따른 각 기업들의 표준화된 공시 보고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이다. 또 싱가포르와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선 2025년부터 기후 혹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ESG 공시의무화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2027년이 될지, 2028년이 될지 아직까지 로드맵도 발표하지 않는 우리 정부에 비해, 앞서 공시를 준비하는 국가들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서나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규제 시점만 기다리기보다, 조직 내부적으로 이를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EUDR이나 그린워싱 규제처럼 일부 규제의 경우 워낙 시장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불만이 높다보니, 적용시점이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